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시작

행정사무감사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오늘 제3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35건(조례안 27, 승인 · 동의안 7, 기타 1)의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상의 위법 ·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편성 ·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 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성환 의장은 "비록 제한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 ·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 ·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일제 맞섰던 독립운동 정신, 촛불로 타올라"

文대통령,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에 축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00년 전 선조들은 비폭력, 평화, 평등, 정의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3 · 1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맞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에서 축전을 통해 이 같이 전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했다. 이날 축전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대독했다.

이어 "선조들의 정신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고, 2016년 겨울 촛불로 타올라 '나라다운 나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과 관련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3 · 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국민참여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우리 뿌리를 확인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한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논의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이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주권의 힘과 한반도 평화 · 번영의 길,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학교운동부 비리 없애려면 지도자 고용 안정부터"

성경찬 도의원, 고용안전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이 7일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군 1선거구)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질문도 한바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7일 도내 각급학교 운동부 지도자 100여명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이만수 장학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입장'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체육인노동조합 박정하 위원장의 '학교운동부 비리 없애려면 지도자 고용 안정부터' 주제 발표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참석한 각급학교 지도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엘리트체육 지도자로 농구, 육상, 양궁, 수영 종목 등 총 233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했고 이에따라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주의 A학교 지도자는 "10년이 넘도록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봉 3천도 안 되는 열악한 현실에 살고있다"며 "적은보수로 인한 고통과 함께 매년 계약에 대한 불안함으로 심적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한 여러 지역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교장이나 운동부 감독 교사들의 눈치 때문에 외부 간담회 등의 출장 나가는 것이 부담스런 경우가 종종 있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청소, 학교잡무 등을 처리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성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생선수들의 행복과 미래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李 총리 "日 자기중심 발표, 온당치 않다"… 환담 온도차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자기중심적 발표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최근 한일 정상 환담을 둘러싼 양국 온도차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일본과 한국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한 반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없다'고 보도했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 총리는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다. 만난 뒤에 양국 발표문을 보니 구성 자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발표문은 제 발언이 60%, 아베 총리 발언이 40% 정도였지만 일본 외무성 발표에는 95대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발언이 뭐였냐고 물으면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방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대화 내용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 않는다"며 "온도차는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7월 이후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수출규제를 철회해 신뢰를 회복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與 검찰개혁특위, 전관예우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가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진 검찰의 전관예우 실태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검개특위 4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주민 · 이종걸 검개특위 공동위원장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용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 기자는 최근 MBC 'PD수첩'과 함께 검사범죄 2부작을 취재해 보도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불필요한 전관예우와 사건배당은 현직 검찰에게는 권력원천이고 퇴직 검찰에겐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이자 전현직 검찰의 굳건한 네트워크 유지 이유"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시스템 마련에 특히 역점을 두고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놓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검찰이) 공식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 (비판 의견을) 표현하고 야당과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국회만 넘기자고 생각한다면 큰코 다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며 "퇴임 검찰을 대거 발탁 · 공천해 (검찰 출신들이)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 듯한 야당 생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대국민 이슈에 검찰개혁도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심 기자는 취재 소회를 밝히며 "검찰의 수사과정이 블랙박스 같다고 느꼈다. 인풋으로는 피의자가 누구이고 혐의가 뭔지가 있는데 아웃풋(수사결과)이 나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이 수사기관 조사 전 과정의 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어떤 증거조작이나 인권유린이 벌어질지 모른다. 블랙박스를 감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기자는 전관 변호사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수임내역 공개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준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공동위원장은 "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조만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심 기자의 수임내역 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내용이라 추후 논의해보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몰래변론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애매한 범죄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야기를 검토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종회 의원, 김제 · 부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확보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 · 부안)은 7일 "교육부로부터 김제 · 부안 교육현안사업 예산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제 덕암정보고의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다.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 지역의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1 · 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부안 줄포지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 13억원과 부안 변산중 노후 냉난방 시설 및 조명개선 사업 2억900만원 등 15억9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